

젠더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정책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 변화 추이

– 언어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Tendencies of Orientations in Women's Policies and Policy Priorities for The Overcoming of the Gender Crisis

– Focused on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by The General Plan of Women's Policy –

Hye Won Ahn

38Wolgok-Gil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policies on women observed in the 1st general plan of women's policies through the 4th one in order to overcome the gender crisis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eywords 'women,' 'society,' 'activity,' 'support,' 'improvement,' 'culture,' 'legal system,' and 'activation' had high centrality in the 1st general plan of women's policies from 1998 to 2002. Second, keywords 'women,' 'equality,' 'participation,' 'expanding,' 'policy,' 'gender equality,' 'support,' 'enhancement,' and 'home' had high centrality in the 2nd general plan of women's policies from 2003 to 2007. Third, keywords 'empowerment,' 'policy,' 'support,' 'employment,' and 'base' had higher centrality than average in the 3rd general plan of women's policies from 2008 to 2012. Fourth, keywords 'empowerment,' 'enhancement,' 'establishment,' 'support,' 'competence,' 'policy,' 'home,' and 'gender equality' had high centrality.

Key words: women policy, the general plan of women's policy, semantic network analysis

국문초록

이 연구는 아직까지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불안하고 사회적 약자인 입장에서 젠더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8년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까지의 여성 정책을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이용하여 정책변화의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 Tel. +82-51-510-1291. E-mail. heywon8151@hanmail.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Dec. 5, 2014 / Revised: Dec. 9, 2014 / Accepted: Dec. 22, 2014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 “사회”, “활동”, “지원”, “개선”, “문화”, “법제도”, “활성화” 키워드의 중시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차 기본계획의 경우 처음 시작하는 계획으로써 기존의 법제도적 관행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 반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 “평등”, “참여”, “확대”, “정책”, “양성”, “지원”, “제고”, “가정”의 키워드 중시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차 기본계획이 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조성을 시도한 시기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여겨진다. 셋째, 2008년부터 2012년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경우 “강화”, “정책”, “지원”, “취업”, “기반” 키워드가 중시성 값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차, 2차 기본계획에서 법제도적 및 정책적 기틀을 마련한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여성의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주여성에 대한 권익 증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넷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경우 “강화”, “제고”, “구축”, “지원”, “역량”, “정책”, “가족”, “성평등” 키워드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4차 기본 계획에서는 여성 고용의 활성화가 강조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돌봄 지원과 성평등 정책 측면에서 성인지를 강조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여성정책, 여성정책기본계획, 언어네트워크

1. 도입

역사적으로 여성은 ‘시민’에서 배제된 존재였으며, 구휼 및 규제, 계몽의 대상이었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1945년 UN이 성과 인종,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UN 헌장에서 선언하면서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 뒤를 이어 ILO, UNESCO 등의 각종 기구에서도 성차별을 금지하는 협약을 내놓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1948년 제정한 헌법¹⁾에서 성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소극적인 문구에 불과했다. 1980년대에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등 여성정책에도 변화가 있는 변화가 있는 듯 보였으나 질적인 변화는 요원하였다. 당시 여성의 정치나 사회 참여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을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한 면이 강했다(백영주·김수지, 2005).

이후 본격적인 여성정책 추진기구의 설치는 1988년 정무(제2)장관실에서 시작했다. 이후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의 설립으로 본격적·전문적인 여성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성차별 금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들이 도입·시행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여성정책은 선진국에 비추어 손색없는 기구와 법률들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국가 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김영옥 외, 2004).

이러한 정책의 실현, 정책의 꽃은 법이다. 정부는 1984년 비준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하여 가족법관련규정 등 협약의 유보조항에 대한 철회와 남녀평등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했다.

1)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1987년에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과 모성보호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1989년에는 호주상속이 호주승계제로 바뀌고 친족의 범위가 남녀평등하게 조정되었으며, 공무원 임용시 남녀의 차별을 규제하는 조항을 폐지하였다. 1994년에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1995년에는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정책의 근거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0년에는 비례대표의원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정당법’이 개정되었다(김선옥, 2000).

그러나 일상적 여성들의 삶을 보면 여성정책 추진기구와 그간의 다양한 정책과 법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의 변화에 상응할 만큼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김영옥·마경희, 2004). 여성취업자의 40.6%가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남성의 60%에 불과한 실정이며, 장·차관급 72명 중 여성은 4명에 불과하다(뉴시스, 2014. 3. 8). 따라서 이 연구는 이처럼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 입장에서 젠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여성정책의 시대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차부터 4차까지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정책 관련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여성정책의 개념과 특성

세계화·국제화를 지향하는 지구촌사회에서 여성적 관점은 지극히 다원적 양상을 띠고 있어 여성정책의 추진방향 또한 그 국가나 지역 및 사회가 지향하는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일정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어떤 지역이나 국가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융복합성을 띠고 있으며(권영자, 1995; 박미옥, 2004)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필화(1990)는 여성정책은 여성의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 이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며 그 행동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권영자(1995)는 여성정책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인식하에 국가는 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불평등한 상황 하에서 여성들이 감수하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지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계획들이라고 하였다.

여성정책의 개념이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정책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부터이다. UN은 1967년 11월 총회에서 ‘여성차별철폐선언’을 채택하였고, 1974년 여성지위위원회가 ‘여

성차별철폐협약' 초안을 만든 이후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였으며, 1979년에는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을 UN총회에서 채택하였다. 1979년의 협약은 당사국들에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김선옥, 2007).

UN이 추구하는 여성정책의 개념은 '정치, 사회, 문화, 공적생활, 교육, 고용, 보건, 금융과 사회보장, 농촌관계법'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현재는 인권문제까지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UN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책도 해방이후 요보호여성을 중심으로 한 '부녀복지의 개념'에서 점차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개념으로 바뀌어 최근에는 여성의 인권·평화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김현숙, 2009). 법적 측면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개념 및 범주는 국가가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까지 포함하고 있다(여성발전기본법 제1조, 제3조).

이상의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여성정책은 남녀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게 사회적 불합리 요소를 철폐하고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평등 사회를 이룩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은 정책의 범위와 성격, 대상에서 다른 정책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정책은 여러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정책범위가 광범위하고 종합성을 가지는 것이 특성이다(김현숙, 2009). 여성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책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차별의 문제와 여성의 권익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포괄성과 종합성을 지닌다(조우철, 1998). 둘째, 여성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평등사회를 이루려는 포괄적인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대상범위가 넓고 상징성이 높다(조영래, 2000).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의 특성은 정책대상의 다양성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의 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는데, 여성정책은 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제도적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행동계획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다(장필화, 1990).

2.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논의

여성문제의 정책화가 이루어진 국내의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80년대 이후 성장한 각계각층 여성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성의 문제가 사회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여성관련 의제를 제공했고, 여론을 주도했으며, 활발하게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했다. 여성평우회(1983년)와 여성의 진화(1983년) 그리고 여성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우산조직인 한국여성단체연합(1987)의 결성은 이후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성격변화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김현숙, 2009).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추진 기구는 1988년 정무장관(제2)실에서 전체 정원 20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0년 국무총리훈령 제243호에 따라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소관업무를 지정하였고 1993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원을 증원하였다.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어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고,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인원을 증원하였다.

본격적인 여성부의 출범은 2001년이다. 2001년 1실 3국 11과, 정원 102명의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여성부 내 조직을 개편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정보화 사업 강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정책홍보관 리실을 설치하여 정책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5년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여성, 가족 및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며 인원도 대폭 증원하였고, 2007년 여성가족부 내 가족통합팀을 설치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업무를 강화하였다. 2008년 여성가족부는 다시 여성부로 출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 강화 등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2010년 여성부는 다시 여성가족부로 출범하였고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및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직의 규모를 확장·개편하였고, 현 시대·사회적인 추세에 따라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증원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이처럼 우리나라는 1988년 이후 여성과 관련된 부처를 만들어 여성정책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오늘날 4차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기본전략은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다양한 여성·가정 복지서비스의 확충,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이다(여성부, 1998).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정부의 정책에 양성 평등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및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조성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한 정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모성보호 강화, 보육서비스 확대, 평등문화의 확산 지속 추진 등 제1차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 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를 목표 삼았다.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와 ‘협력 체계 구축(Partnership)’을 제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추진은 성 주류화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인남녀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여성대상만의 정책을 넘어 남성을 변화시키고 남녀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포함함으로써 성 주류화 전략의 철학과 기초가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은 계획의 성격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협력체계 구축' 역시 매우 중요한 추진전략의 하나였다(여성부, 200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비전으로 성숙한 성평등 사회를 제시하며 여성의 역량강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지난 10여 년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틀을 구축·보완하였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여성인력 활용, 여성의 권익보호,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여성부, 2008).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를 비전으로,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를 목표로 수립·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보장,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여성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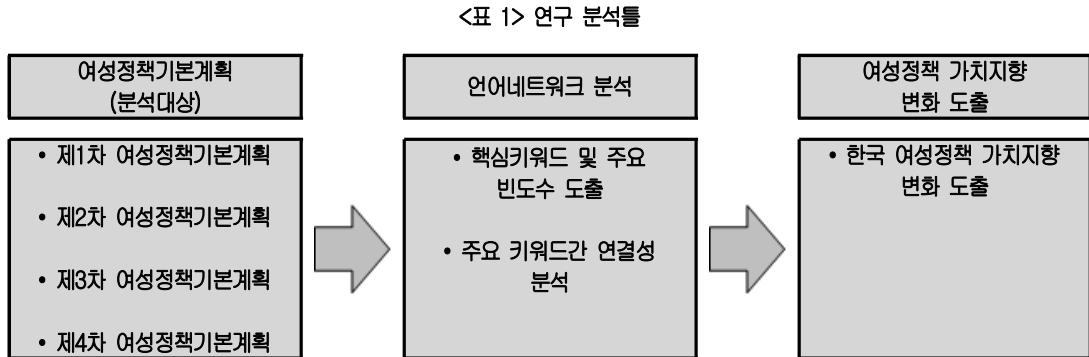
3.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여성정책 경향분석과 분석틀

최근 들어 연구나 정책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의 먹이사슬 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나 정책 간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네트워크 분석방법이 다양한 형태를 가진 사회 시스템 내의 관계적 구조를 파악하여, 대상들 간의 특정한 연계성 분석을 통해 대상의 사회적 행위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본질적 특성 때문이다(최호택 외, 2012).

즉, 네트워크 분석은 중심성 개념을 통해 연구경향의 관계행태를 묘사적으로 서술할 수 있고,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구조적 분절성과 쟁점 간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를 밝힐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해 오던 전통적인 정책 변화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단순한 주제별 분류 방식이 아닌 여성정책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연구경향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여성노동환경, 이주여성 문제 등 여성정책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책 분석 연구가 근본적 여성정책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제를 갖는다. 즉, 여성정책의 최상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자 미래에 대한 구상인 기본여성정책을 바탕으로 이차 다른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결정되고 기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998년부터 2017년도 까지 총 4차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경향성 분석을 통해 여성정책 변

화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III. 조사 설계

인간의 언어를 분석한 언어네트워크방법론(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일종의 내용분석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내용분석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핵심단어·아이디어 등을 조사하는 연구방법인데(박한우·Leydesdorff, 2004: 1377-1388), 내용분석 대상은 문자부터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통적인 내용분석방법은 이제까지 학문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임의로 만든 분석의 항목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노동 비용도 많이 들어가며, 외적 타당성이 제한되어 연구자의 성향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그 한계가 있었다(박한우·Leydesdorff, 2004: 1377-1388 ; Rice & Danowski, 1993: 369-397).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것이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이다. 최근 들어 몇몇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으로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²⁾ 프로그램과 NetMiner³⁾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박한우, 2006 ; 배연석, 2001 ; 사이람, 2010 ; 신준섭·김지수, 2011: 173-203 ; Lim, 2002: 328-366 ; 김용학, 2004).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차부터 4차까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여,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프로그램과 NetMiner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언어네트워크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Loet Leydesdorff 교수가 개발한 Full Text 소프트웨어를 한국어 분석을 위해 변형한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 프로그램은, 크게 3개의 하위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데, KrKwic(단어 빈도 분석을 통해 핵심어, 주요 이슈를 파악함), KrTitle(논문, 웹사이트, 기사, 법조문 등의 제목과 요약문 또는 주관식 응답 등과 같이 비교적 짧은 메시지), KrText(비교적 분량이 많은 메시지)로 구성된다(박한우, 2006).

3) NetMiner는 (주)사이람에서 개발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이다. 데이터 변환, 네트워크 분석, 통계분석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사이람, 2010).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의 연구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탐색적 자료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연차별로 발간된 연구논문의 주제를 자료화·유형화 하였다. 둘째, 핵심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분류를 시도하였다. 즉, 핵심단어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셋째,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핵심단어에 대한 행렬매트릭스 방정식(‘단어×단어’ 공출현 행렬)을 완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핵심단어 간의 사회네트워크 연결망⁴⁾ 내지 결합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사이람, 2010 ; 김용학, 2004).

IV.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연구주제어 분석

1차부터 4차까지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연차별 핵심주제어를 보면, 우선, 각각의 기본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여성”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1차 기본계획에서는 “증진”, “지원”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았고, 2차 기본계획에서는 “평등”, “강화”, “제고”, “양성”, “가정”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았으며, 3차 기본계획에서는 “강화”, “취업”, “확대” 등의 주제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4차 기본계획에서는 “강화”, “가족”, “제고”, “지원”, “성평등”, “역량” 등의 주제어 빈도가 높았다.

4) 네트워크는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고, 사회네트워크 연결망 내지 사회연결망 이론은 관계적 인간관의 산물로서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다. 김용학(2004)에 의하면, 사회연결망 이론은 개인적 측면의 대인 관계망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자본과 연결망, 시장과 국가의 연결망, 조직의 연결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김용학,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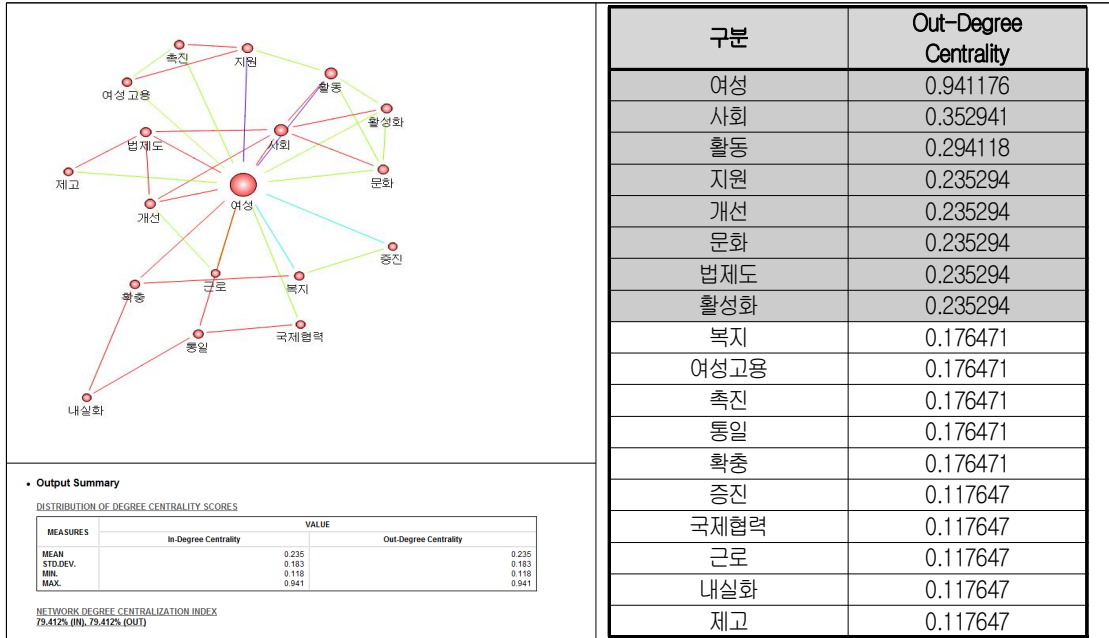
<표 2> 주제어 분석결과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4차 기본계획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11	여성	37	여성	19	여성	21	여성
3	증진	10	평등	6	강화	7	강화
3	지원	7	강화	4	취업	6	가족
2	개선	7	정책	4	확대	6	제고
2	국제협력	6	제고	3	기반	5	지원
2	근로	5	양성	3	보호	4	성평등
2	내실화	4	가정	3	지원	4	역량
2	문화	3	개정	3	추진	4	조성
2	법제도	3	고용	2	가정폭력	3	건강
2	복지	3	문화	2	경력	3	경제
2	사회	3	사회	2	권익	3	구축
2	여성고용	3	조성	2	방지	3	돌봄
2	제고	3	지원	2	사회적지지	3	성인지
2	촉진	3	참여	2	여성인력	3	정책
2	통일	3	확대	2	여성정책	3	피해
2	확충	3	활성화	2	이주여성		
2	활동			2	정책		
2	활성화			2	차별		
				2	협력		

2.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변화 패턴 분석

1) 1차(1998-2002년) 여성정책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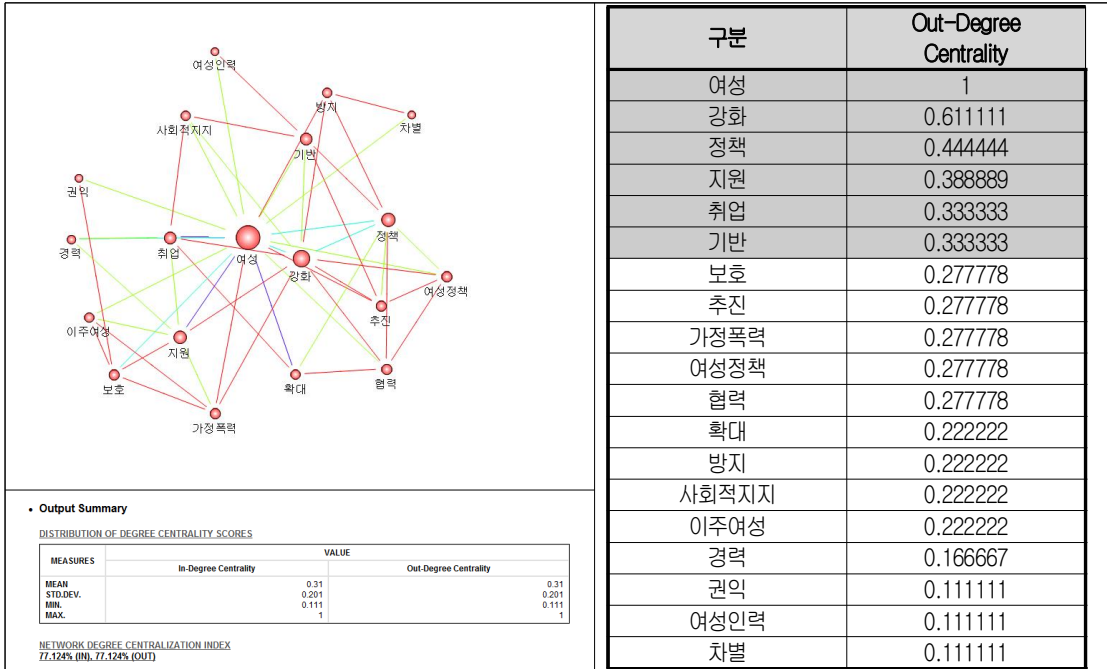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여성”키워드가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 “활동”, “지원”, “개선”, “문화”, “법제도”, “활성화” 키워드의 중심성 값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1차 기본계획에서는 “통일”, “국제협력” 등의 키워드가 다른 기본계획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키워드이다. 이는 1차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계획으로써 기존의 법제도적 관행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지며,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여성의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림 1〉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분석결과

2) 2차(2003-2007년) 여성정책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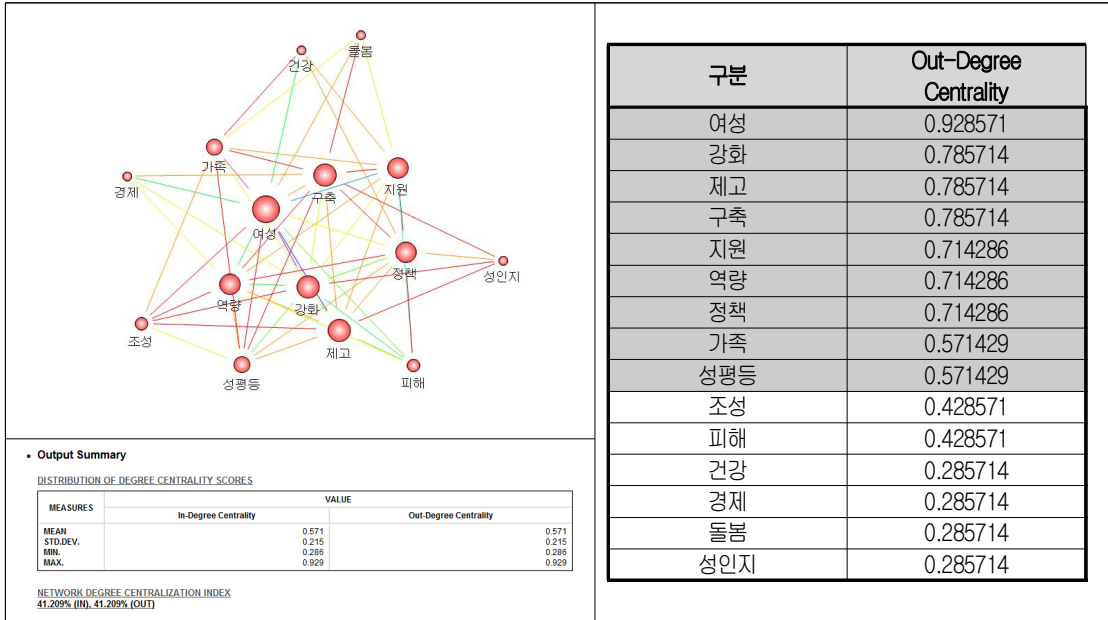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여성” 키워드가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평등”, “참여”, “확대”, “정책”, “양성”, “지원”, “제고”, “가정” 키워드 중심성 값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조성을 시도한 시기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차 계획에서 법제도적 준비를 이룬 후 2차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여성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3>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분석결과

4) 4차(2013-2017년) 여성정책 기본계획

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여성”키워드가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화”, “제고”, “구축”, “지원”, “역량”, “정책”, “가족”, “성평등”키워드가 평균보다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4차 기본계획서는 “돌봄”, “성인지” 등의 키워드가 기존 기본계획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키워드이다. 4차 기본 계획에서는 여성 고용의 활성화가 강조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돌봄 지원과 성평등 정책 측면에서 성인지를 강조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분석결과

3. 시사점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시대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차부터 4차까지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여성정책 관련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1차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계획으로써 기존의 법제도적 관행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지며,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여성의 국제협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조성을 시도한 시기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차 계획에서 법제도적 정비를 이룬 후 2차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여성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1차 2차 기본계획에서 법제도적 및 정책적 기틀을 마련한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여성의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주여성에 대한 권익 증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4차 기본 계획에서는 여성 고용의 활성화가 강조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돌봄 지원과 성평등 정책 측면에서 성인지를 강조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여성정책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차별의 문제와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평등사회를 이루려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서 그 범위와 대상에서 다른 정책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변화를 살펴보다도 초기 법제도·정책적 기틀을 마련한 이후, 이주여성의

권익, 여성 고용 활성화 등의 시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출현하였다. 지금까지 여성정책이 제도적 기틀마련을 통해 여성의 사회 진입을 촉진하는 단계였다면, 향후 여성 정책은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회 중심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따라서 여성정책도한 이러한 방향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자. 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평등·참여·복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경희. 2005.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정당의 역할과 과제. 한국정당의 여성정책 개발과 전망 여성정책 토론회 자료집.
- 김복태, 문미경, 김윤미, 김대진. 2013.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노인장기요양과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 27-60.
- 김선옥. 2000.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법학논집. 4(4): 139-162.
- 김선옥. 2007.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 마경희. 2004. 주류화와 성평등의 논리: 한국 여성정책의 뉴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편역서. 여성부.
-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김현숙. 2009. 지방정부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창원시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뉴시스. 2014. 與野 '여권신장' 한목소리...野는 朴대통령 여성정책 비판. 2014. 3. 8일자.
- 대한민국 헌법.
- 박미옥. 2004. 한국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실태분석: 용인시의 여성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 평가학회지. 14(3): 371-399.
- 박한우, L. Leydesdorff. 2004. 한국어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 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6(5): 1377-1388.
- 박한우. 2006. 한국어 메시지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소프트웨어의 소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강자료집.
- 백영주, 김수자. 2005.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현황과 관리방안: 해방이후~1980년대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물관리학회지. 5(1): 5-21.
- 사이람. 2010. 넷마이너에 의한 사회네트워크 분석. 서울: 사이람.

- 신준섭, 김지수. 2011.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173-203.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부. 1998.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98~2002). 여성부.
- 여성부. 200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여성부.
- 여성부. 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여성부.
- 여성부. 201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여성부.
- 장필화. 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여성학적 시각에서. 여성학논집. 7: 11-22.
- 조영래. 2000. 한국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우철. 1998.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호택, 류상일, 정석환, 이민규. 2012.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정책 경향분석(I): 민선 5기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2): 661-671
- 배연석 역. 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Lim, Elvin T. 2002. Five trends in presidential rhetoric: An analysis of rhetoric from George Washington to Bill Clint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2(2): 328-366.

안혜원: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제목: 한국적 창조도시의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2012)를 취득하고, 현재 충청대학 경찰행정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문화정책, 지역개발 및 재난관리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가와 지방간 소방사무 재배분에 관한 논의(2013)”, “한국 위기관리분야 사례연구방법에 관한 내용분석(2012)”, “지역축제 활성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2010)”, “충남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2009)” 등이 있다(heywon8151@hanmail.net).